

울리히 벡의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

: 국제정치학적 분석

이창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11 테러 이후 위험의 세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글은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의 내용과 그 함의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 이론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능주의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벡의 연구는 재난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동시에 벡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근대화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시공간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더 나아가 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환경·생태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고, 이것이 근대국가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였다.

주제어: 위험사회, 세계위험사회, 방법론적 민족주의, 계시민주주의적 현실주의

I. 머리말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위기(crisis)는 위험(risk), 위해(hazard), 재해(disaster), 재난(catastrophe), 위난(danger), 위협(threat), 긴급상황(emergency), 불안(insecurity)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는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사회과학자들은 이 개념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해왔는데, 각 학문의 성격과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의 내용과 그 함의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론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능주의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벡의 연구는 재난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동시에 벡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근대화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시공간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더 나아가 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환경·생태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고, 이것이 근대국가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였다.

한국 학계에 위험사회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¹⁾. 그 결과 벡이 방법론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위험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 위험의 세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위험사회의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고려는

1)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전반에 대해서는 이재은,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0권 1호(1998)참조.

2) 한국 학계에서 벡의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로는 노진철,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화 사회(2004년 가을); 정태석, 위험사회의 사회이론: 위험을 어떻게 이론화 할 것인가?, 문화과학, 제35호 (2003); 김영욱,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2호 (2006년 겨울) 참조.

필수불가결하다.

이 글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백이 제시한 위험사회 개념을 정리한다. 3절에서는 위험의 세계화 이후 위험사회가 세계위험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백이 제시한 위험사회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위험사회 분석이 가지는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II. 위험사회: 근대화의 결과

사회과학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백은 위험사회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먼저 제시한다. 그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socially constructed phenomenon)’으로 인식상에서는 항상 존재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그는 위험을 재해와 구분한다. “위험은 재해에 대한 예상을 의미한다. 위험은 영구적인 가상 상태 속에서 존재하며, 오직 예상되는 만큼만 ‘화재’가 된다. 위험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처럼 되어가는’ 것이다(Beck, 2006: 332).”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항상 객관적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그는 위험의 시공간적 조건을 정의한다. “위험은 신이 떠난 때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위험은 인간의 결단을 전제한다(Beck, 2006: 333).” 중세적 질서가 쇠퇴하고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 내재된 대립과 모순으로 인해 계산될 수 없는 위험들이 발생하였다. 첫째, 근대과학 기술의 발전은 생산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파괴력도 증가시켰다. 둘째, 개인주의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워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화 시기에 등장한 위험은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체계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백은 위험을 “근대화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험과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한다(Beck, 1992; 홍성태, 1997: 51).

백은 위험사회를 “근대사회가 발전해가는 각 시기별 단계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Ulrich Beck, 1997; 문순홍, 1998: 52). 백이 제시하는 위험사회의 특징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의 지속이다. 산업사회의 제도들로서는 위험사회에 존재하는 사

회·정치·생태·개인적인 위험들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위험들의 성격이 우연적이면서 예외적이기 보다는 필연적이면서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위험은 생태위기나 과학기술 사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가족, 성 역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위험은 탈지역성, 불계산성 및 불보상성의 특징을 가진다.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근대화 과정의 전개에 따라 변화한다. 제1차 근대화가 봉건사회의 구조를 해체하고 산업사회를 구성한 것과 유사하게, 제2차 근대화는 산업화를 해체하고 다른 종류의 사회를 구성한다. 근대화 단계에 따라 위험이 등장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전적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논리가 위험의 주요한 원천이었다면, 현대적 산업사회에서는 초국가적인 자본을 대변하는 논리가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은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세 가지 관련 영역 속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이 개념은 산업사회가 맺어 온 자연자원과 문화자원과 관계를 다룬다. 이 자원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진되거나 해소되었다. 둘째, 이 개념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위험들 및 문제들과 맺는 관계를 포착한다. 이 위험들과 문제들은 사회적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고, 사회질서를 정당화해주었던 기본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셋째, 이 개념은 개인들에게는 극도로 다양하고 상호모순될 수 있는 전지구적인 위험들에 주목한다. 이 위험들은 개인들에게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Beck, 1997; 문순홍, 1998: 57-59).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이행은 인식론적으로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분화로 표상된다. 위험을 정의할 때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을 분쇄하면,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Beck, 21997; 문순홍, 1998: 68). “위험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과학적 논쟁에 의존하는 것처럼, 산업발전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사실상 사회적 기대와 가치평가에 의존한다(Beck, 1997; 문순홍, 1998: 66).”

특히 후기 근대사회에서 위험은 “체계적이고 종종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과적 해석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에 대한 (과학적 또는 반과학적) 지식의 견지에서만 존재한다... 그만큼 이 위험은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될 소지를 특히 많이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대중매체 및 위험을 정의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과학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핵심적인 사회 정치적 지위집단이 된다(Beck, 1997; 문순홍, 1998: 57).”

벡은 위험의 본성의 변화를 근대성의 변환에서 찾고 있다. 벡은 근대화를 두 단계/ 시대/ 국면으로 구분한다. 근대화 과정에는 단절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근대성의 소멸이 아니라 변환을 의미한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벡은 재귀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제2차 근대화(second modernization)’라고 부른다. 재귀적 근대화는 근대성의 초월 또는 부정을 의미하는 탈근대화는 다른 개념이다(Beck, 2000; Beck & Lau, 2005).

<표 1> 근대화의 구분 기준

	단순/1차 근대사회	재귀/2차 근대사회	탈근대 사회
경계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호하지 않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계 (사회적 영역간, 자연과 사회간, 과학과 비과학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와 근본적 구분의 다원성 이러한 다원성의 인정 자의식적으로 허구적인 경계 제도화의 필요성 제도화된 의사결정의 새로운 문제 (책임의 갈등과 경계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의 해체를 향하는 다원성 이러한 다원성의 인정
사회에서 과학의 기능, 성격,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합의의 담론을 통한 논쟁의 종결 부작용과 지울 수 없는 잔여 불확실성의 최소화 정당한 지식의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순적 과학 진영의 증가 추기적인 과학적 정당화의 인정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 증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도적 수단을 통한 논쟁의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화의 필요성 감소 및 임의적 다원성의 인정

자료: Ulrich Beck(2003: 22).

이러한 근대화 시기구분에 의거하여 벡은 위험사회를 두 가지 국면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 잔여 위험사회이다. 잔여 위험이 주변화되는 이유는 통제될 수 있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는 산업화의 결과인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재귀적 위험사회이다. 재귀적 근대화에서 위험사회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근대화가 위험을 통제하는 방향에서 지속함으로써 산업사회적인 토대를 반사적인 종류의 자기 위험으로 대면한다.” 둘째, “의식화, 즉 이러한 관계들을 반성하는 것이다(Beck, 1997; 문순홍, 1998: 52).”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이론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벡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인식론과 존재론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벡은 위험보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식론의 존재론에 대한 우위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사회적 차원의 ‘성찰(reflexivity)’ 혹은 ‘재귀’(reflexivitat)의 중요성을 과장하게 만든다³⁾. 둘째, 벡의 이론에는 위험의 원인에 대한 혼동이 존재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재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재이다. 물론 그도 자연재해에 관심을 가지지만, 초점은 자연재해가 근대화에 의해 어떻게 확대·심화시키는가에 두어져 있다. 셋째, 위험사회는 국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테러, 쓰나미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국제적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벡은 위험 요소/영향의 세계화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적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III. 세계위험사회: 위험의 세계화와 세계시민 주의의 등장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라는 개념은 초국가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 벡이 제시한 개념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들은 생태적 갈등, 금융 위기 및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 지구적 위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호의존의 표현이다. 다른 한편

3) 두 개념은 영어로는 동일하게 쓰이지만, 독일어에서는 구분된다. 벡은 이 개념들을 둘러싼 혼란을 지적하면서,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래쉬(Scott Lash)의 개념이 지식(반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자신의 개념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무지(unawareness)를 함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Beck, 1998).

으로 지구적 위험은 제2차 또는 성찰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위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의 구분이 없어진다. 지구적 위험은 경계, 규칙, 책임의 해체와 재구성을 포함하는 메타 권력 게임을 촉발시킨다. 지구적 위험들은 그 영향이 국경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구화로 인해 위험은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위성전화를 통해 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에서도 동시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 장거리 항공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발원하는 질병(예를 들어, SARS, 조류독감 등)이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Elbe, 2008). 해외 여행객의 수가 급증하면서 각국은 국경 밖에서 보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국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 쓰나미 사건의 피해자들 상당수는 유럽 여행객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공동의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Alexander, 2006).

9·11 이후 위험의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이후 자연, 산업 및 환경 위험과 함께 군사 및 금융 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테러집단들과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경우, 세계가 군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대량살상무기가 개인이 쉽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금융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세계금융중심도시인 뉴욕에 대한 공격은 세계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당시 각국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비상 상황에 공동대처를 하여 금융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에너지원의 집중, 인구의 집중, 정치경제권력의 집중에 따라 더욱 테러의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Perrow, 2007).

세계위험사회론은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사회론이 가지고 있던 존재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민족국가 단위에 기반해 있는 위험사회론은 지구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민족국가 단위 분석은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다섯 가지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 더 이상 민족국가 단위로 질서와 권위의 경계, 범주,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둘째, 정치경제적 상호연관성은 민족국가 차원이 아니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셋째, 민족국가를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등장한 민족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넷째, 민족국가와 국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의 등장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은 민족국가이지 국가 자체가 아니다. 국가는 다른 형태로 진화해나갈 것이다. 다섯째, 민족국가 중심성 약화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EU와 같은 초국가적 단위체도 민족국가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보다는 그 위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발전과 세계시민주의의 확산으로 초국가적 단위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초국가적 또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안(국내)과 밖(해외)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Beck, 2005: 43-50).

방법론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백은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한다. 안/밖, 국내/국제라는 이분법을 탈피하기 위해 고안된 이 개념은 세계시민화(cosmopolitanization) 개념을 전제한다. 세계시민화는 민족 사회의 외부로부터가 내부로부터 진행되는 내재적 지구화(internal globalization)를 의미한다. 독백적 상상력에 기반한 방법론적 민족주의와 달리 세계시민화는 내재화된 타자(internalized other)를 인정하는 대화적 상상력(dialogic)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는 안과 밖을 포괄하는 다섯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밖에서는 자연의 타자성, 다른 문명들과 근대성들의 타자성 및 미래의 타자성을 포괄한다. 안으로는 객체의 타자성의 포함과 국가의 (과학적, 단선적) 합리화에 대한 독점의 극복을 의미한다(Beck, 2002: 18).

역설적으로 위험의 세계화는 국경을 밖에서 일어난

위험의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세계시민사회의 탄생에 기여한다.

지구적 위험사회의 경험은 겉으로 보기에 배제되어 있는 타자와 갑작스럽지만 완전히 의식적인 대면을 하게 만든다. 지구적 위험은 민족적 경계를 해체하며 외국인 과 본토인을 뒤섞게 만든다. 멀리 있는 타자가 품안에 있는 타자가 된다 - 이동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세계시민적으로 변한다. 인류는 다자와의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Beck, 2006: 331).

위험사회에서 세계위험사회로 이행은 위험의 각 수준에서 변화를 촉발시켰다. 첫째, 공간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험은 민족국가나 어떤 종류의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둘째, 시간적 차원에서 핵 폐기물과 같은 장기간 피해를 주는 위험은 시간에 의해 결정되거나 제약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복잡한 위기는 원인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는 것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Beck, 2006: 334).

<표 2> 민족 관점에서 세계시민 사회과학으로 패러다임적 전환

		정치적 행위	
		민족 관점	세계시민 관점
정치학	방법론적 민족주의	정치적 실천과 과학에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민족국가 중심적 이해	민족국가가 조직한 사회, 문화, 정치의 '좀비 범주'에 대한 비판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	민족국가중심적 사회 및 정치, 사회학 및 정치학의 개방: 세계시민적 의도를 가진 신비판이론	세계시민 사회와 그 적들. 세계시민 사회, 국가, 체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료: Beck(2002: 53).

정치적 차원에서 세계위험사회를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위험의 사회적 구성이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주로 논의된다. 둘째는 위험의 최소화이다. 정치적 현실주의가 이 방식을 선호한다. 세계적 위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개념을 중시하는 전통적 현실주의를 넘어서서 지구

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세계시민주의적 현실주의(cosmopolitan realism)에 기반해야 한다(Beck, 2005).

이론적 차원에서 세계위험사회론은 기존 위험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할 수 없다. 이 개념이 새로운 특질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개념의 공간적인 확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차원에서도 이 이론은 검증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검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Boyne, 2002).

IV. 위험사회로서 한국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와 같은 하드웨어적 형태에서부터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행정조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지 않아, 2007년 태안반도 앞 기름유출 사건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재는 고사하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조차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보는 데는 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위험의 존재는 위험사회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을 위험사회로 보기 위해서는 벡이 제시한 필요조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벡의 위험사회이론이 서구(특히 독일)의 근대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벡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위험(사회)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분석을 전제한다. 첫째, 위험 인지는 시간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위험의 인지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둘째, 위험 인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개인의 경험이 일반화되어 대중들에게 인지되는 과정은 단선적인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필요로 한다. 셋째, 위험 인지는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위험 인지는 공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 위험에 대한 지각,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경험, 인간의 감각을 통한 위험의 추적 가능성, 유해 물질에 대한 친숙도, 및 시민들의 당국에

대한 신뢰 등에 영향을 받는다(정기성, 200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위주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적이란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외재적 원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추구했던 발전노선 또는 우리가 만들었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의해 위험이 생산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한상진, 1998: 22).” 이런 문제의식에서 위험(사회)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객관적 변화와 주관적 인지 사이의 불일치의 폭이 비교적 크다. 자발적, 자연적, 재앙적, 지속적,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위험보다는 주관적인 위험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자발적, 즉시적, 일상적, 간헐적, 친숙한 교통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객관적 위험보다는 주관적 위험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원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차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김영평 외, 1995).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역사적 전통, 문화적 특성, 산업화의 속도가 다른 서구사회의 경험에서 나온 위험사회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환은 한국사회를 이중위험사회(dual risk society)로 본다. 위험은 이중성은 근대화를 성취한 이후에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위험과 파행적 근대화로 인한 사회적 합리성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위험의 결합에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기원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을 극대화시키는 돌진적 성장전략에 있다. 서구에서 근대화란 경제적 수준에서 산업화를 통한 성장, 정치적 수준에서 민주화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사회적 수준에서 합리화를 통한 근대적 가치체계 확립을 의미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국가주도하에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행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위험들을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이러한 파행적 근대화가 가져온 이중성 때문에, “근대화의 결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근대화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이중의 과제를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김대환, 1998: 40).”

비슷한 맥락에서 장경섭은 한국 사회를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로 평가한다. 복합이란 형용사의 의미는 선진국형, 후진국형 및 한국형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200-300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 과정을 한국은 30-40년에 압축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들이 빨리 발현되고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선성장-후안전’ 기조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큰 위험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증형·날립형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이 만성화된 원인은 조직적·문화적 역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속도와 효율을 강조한 국가 기업의 돌진적 태도에 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문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보다는 어떻게 하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 결과 위기관리의 반복적 미숙현상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자연재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 쉽게 되었으며, 사회적 노력에 의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인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장경섭, 1998).

파행적 근대화의 역사적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정책에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실시된 식민지 정책은 산업화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조선을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지원기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일제가 추진한 산업정책은 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육성하였다. 박정희 집권기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제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에 집중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근대화를 무시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및 노동문제를 도외시하였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정부조직들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 그 결과 근대화 과정에서 발현하는 위험들을 관리하는 체계의 발전이 지체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조국근대화’ 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위험사회의 문제를 구조화하였다. 첫째, 근대화의 불균등성이다. 대체로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근대화

는 자본주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주의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왔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산업화’라는 공식으로 정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특권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에 수반된 위험에 대한 고려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해요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잠재적인 정치적 도전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설득과 합의를 통한 의사소통보다는 강력한 물리적 폭력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물리적 폭력으로 조성된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위험에 대한 진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불법화되었다. 셋째, 박정희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외형적 결과만을 추구하였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결과주의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 그 결과 안전불감증이 사회에 내재화되게 되었다(노진철, 2004: 152-153).

1987년 민주화 이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정부에서는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증대시켜 왔다. 2003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제도까지 완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이후에도 과행적 근대화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중요한 것을 판단하며, 모든 중요한 것을 행한다’는 국가주의에 있다(성경룡, 1998: 271). 이러한 국가주의는 위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역할과 기능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압축적 근대화’의 신화는 이러한 정치적 결정 혹은 경제성장이 체계적으로 생산해 내는 위험을 현대화에 동반하는 잔여 위험으로 처리했고, 동시에 강한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 그 결과 경제 성장과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체 사회를 지배했고, 이들 결정에 따른 위험은 공개적 논쟁이나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지도 못했다. 일반 시민은 국가들 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국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저항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승인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길들여졌다. 따라서 공중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으며, 그 결과

위험을 자신의 결정행위의 결과로 받아들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의 안전대책에 의존하였다(Beck, 2006: 331).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위험사회론을 적용할 때 국가주의적 편향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주의에 대한 해법은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기능주의적 발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역시 “서구보다 후진적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어휘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적 특수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국가 혹은 행정이 정상적으로 합리화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제거될 수 있다는 기술관료적인 실행가능성의 환상”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노진철, 2004: 100).

국가주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험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전문가 집단의 지식 독점화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담론을 재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원용진, 2003). 이런 점에서 위험을 규정짓는 전문가 집단 내부, 전문가 집단과 대중 사이, 대중 내부의 의사소통은 과학을 성찰적으로 만들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은 1) 전문가 집단의 일방적인 담론에서 출발하여 2) 일반 대중들의 위험 인식으로 진화하고 3) 조직과 공중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로 발전한다.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에서는 개인이 자기성찰을 통해 주체화됨으로써 시민운동이 조직화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은 하위정치(sub-politics)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위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김영욱, 2006).

위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적 합리성을 초월하지 않는 한 위기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 한상진은 유교적 전통에서 공론의 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유교자본주의와 유교사학을 구분한다. 유교자본주의는 유교를 경제성장을 위한 기능주의적 국가이데올로기로 전략시킴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이상을 구현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방기하였다. 민

본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서 유교는 서구사회에서 등장한 다른 유형의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은 자기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미덕에 기반하고 있다. 증용은 극단적인 방법론을 배제하기 보다는 논의의 양끝으로 본다는 점에서 어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추구한다(한상진, 1998).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내회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사회를 제안한다⁴⁾. 문화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이 최대한 축소되어 시민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효율성에 대한 집착을 완화시킴으로써 파행적 또는 돌진적 근대화의 문제점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강내회, 2003).

위험사회론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가지는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인식론적 차원에서 성찰적 태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 성찰성이란 자기반성을 전제하는데,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의 자기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분석의 초점이 국가의 정책과 개입 방식에 대한 비판에 두어지고 있음으로써,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범한 실수와 오류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주의 편향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일반 대중 또는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일반 대중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식과 이론에 대한 독점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킬 것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위험사회론은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세계위험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초국적 차원에서 위험을 증대시키는 현상들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주의 편향에 대한 비판도 초국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에 그치고 있다.

4) 백도 이 점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Beck, 1995: 146-152 참조).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틀로 제시된 백의 세계위험사회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의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의 세계화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백은 세계적 차원에서 위험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화 현상의 진행으로 인해 위험은 더 이상 민족국가 단위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백에게 위험의 세계화는 공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다. 공간적으로 위험은 민족국가의 경계로 구분할 수 없으며, 시간적으로 위험은 전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위험사회론은 근대국가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을 의미한다.

백의 세계위험사회론의 주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극복에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는 민족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초국적 위험에 대해 적 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초국적 위험의 원천 이 되는 현상들 - 테러, 마약, 환경, 불법이민 등 - 이 점 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국 내에서 벌어지는 위험만을 주목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방안의 모색을 어렵게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위험의 세계화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 강내회. 2003. 위험사회, 노동사회, 문화사회. 문화과학. 35: 106-131.
- ▷ 김대환. 1998.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계간 사상 (1998 가을). 26-45.
-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2(2): 192-232.
- ▷ 김영평 · 최병선 · 소영진 · 정익재. 1995.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9(3): 935-954.
- ▷ 노진철. 2004.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 사회(2004년 가을). 98-123.
- ▷ 노진철. 2004. 개입주의 국가의 강화: '암흑적 근대화'의 신화로부터 위험사회의 성찰로. 현상과 인식. 28(4): 141-167.
- ▷ 성경룡. 1998. 실업과 사회해체: 총체적 위험사회의 등장. 사

- 상(1998년 가을호). 247-275.
- ▷ 원용진. 2003. 위험사회와 커뮤니케이션. *문화과학*. 35: 75-90.
 - ▷ 이재은. 1998.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0(1): 113-130.
 - ▷ 장경섭. 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2: 371-414.
 - ▷ 정기성. 2004. 한국 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7(1): 209-232.
 - ▷ 정태석. 2003. 위험사회의 사회이론: 위험을 어떻게 이론화 할 것인가?. *문화과학*. 35: 15-53.
 - ▷ 한상진. 1998. 위험사회에 대한 동·서양의 성찰: 유교의 잠재력은 남아 있는가. *사상*(1998년 봄). 94-119.
 - ▷ 한상진. 1998. 왜 위험사회인가?: 한국사회의 자기반성. *계간 사상*(1998년 가을). 3-25.
 - ▷ 홍성태. 2003. 근대화와 위험사회: '박정희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생태적 개혁의 모색. *문화과학*. 35: 54-74.
 - ▷ Barbara Adam, Ulrich Beck, and Joost Van Loon. 2000. *The Risk Society and Beyond: Critical Issues for Social Theory*. London: Sage.
 - ▷ Charles Perrow. 2007. *The Next Catastrophe: Reducing Our Vulnerabilities to Natural, Industrial, and Terrorist Disast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David Alexander. 2006. Globalization of Disaster: Trends, Problems and Dilemma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9(3): 2-21.
 - ▷ Jeffrey Wimmer and Thorsten Quandt. 2006. Living in the Risk Society - An Interview with Ulrich Beck. *Journalism Studies*. 7(2): 336-347.
 - ▷ Roy Boyne. 2001. Cosmopolis and Risk: A Conversation with Ulrich Beck. *Theory, Culture & Society*. 18(4): 47-63.
 - ▷ Stefan Elbe. 2008. Our Epidemiological Footprint: The Circulation of Avian Flu, SARS, and HIV/AIDS in the World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5(1): 116-130.
 - ▷ Ulrich Beck(tr. by Mark Ritter).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홍성태 옮김. 1997. *위험사회*. 새물결.
 - ▷ Ulrich Beck(tr. by Amos Weisz).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Press.
 - ▷ Ulrich Beck(tr. by Mark Ritter). 1997. *The Reinvention of Politics: Rethinking Modernity in the Global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문순홍 옮김. 1998. *정치*의 재발견. 거름.
 - ▷ Ulrich Beck(tr. by Mark Ritter). 1998. *Democracy without Enemies*. Cambridge: Polity Press.
 - ▷ Ulrich Beck(tr. by Kathleen Cross). *Power in the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 ▷ Ulrich Beck. 2005. World Risk Society and the Changing Foundations of Transnational Politics. in Edgar Grande and Louis Pauly(eds.). *Complex Sovereignty: Reconstituting Political Autho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 Ulrich Beck. 1996. World Risk Society as Cosmopolitan Society?. *Theory, Culture & Society*. 13(4): 1-32.
 - ▷ Ulrich Beck. 1998. Politics of Risk Society. in Jane Franklin(ed.). *The Politics of Risk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 Ulrich Beck. 2000. The Cosmopolitan Perspective: Sociology of the Second Age of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79-106.
 - ▷ Ulrich Beck. 2002. The Cosmopolitan Society and Its Enemies. *Theory, Culture & Society*. 19(1-2): 17-44.
 - ▷ Ulrich Beck. 2002. The Terrorist Threat: World Risk Society Revisited. *Theory, Culture & Society*. 19(4): 39-55.
 - ▷ Ulrich Beck. 2006. Living in the World Risk Society. *Economy and Society*. 35(3): 329-345.
 - ▷ Ulrich Beck, W. Bonß and C. Lau. 2003. The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Problematic, Hypotheses and Research Programme. *Theory, Culture & Society*. 20(2): 1-33.
 - ▷ Ulrich Beck and C. Lau. 2005. Second Modernity as a Research Agend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s in the 'Meta-change' of Modern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525-557.
 - ▷ Ulrich Beck and Natan Sznaider. 2006. Unpacking Cosmopolitanism for the Social Scienc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1): 1-23.
 - ▷ Ulrich Beck and Natan Sznaider. 2006. A literature on Cosmopolitan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1): 153-164.
-
- 李王徽**: 2005년 런던 정경대(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변환의 세계정치*(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2007),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6권: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2008)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주주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판(2006)", "세계금융중심도시 네트워크의 국제정치경제(2006)", "Pulling South Korea away from China's Orbit: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2007)", "Korean Foreign Policy and the Rise of the BRICS Countries(2007)",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South Korea: Crony Capitalism after Ten Years(2007)" 등이 있다(leew@ajou.ac.kr).